

대형차 최고속도 제한 장치는 ‘무용지물’

의무 설치 규정...화물차 등 불법 개조해 과속 질주

말로만 정기검사시 점검강화...당국도 단속 무관심

■김모(61)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식은 땀이 흐른다. 관광버스·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는 속도 제한기가 부착돼 일정 속도 이상 낼 수 없는데도, 굉음을 울리며 제한속도(시속 90km)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는 화물차량들 때문이다. 그는 “관광 버스 등이 갑자기 뒤에서 달려오며 알아서 피하라는 식으로 깜박이등을 켜고 위협할 때면 아찔하다”고 털어놓았다.

■. 관광버스 차주 이모(42)씨는 최근 30만원을 주고 시속 110km로 제한된 속도제한 장치를 시속 130km로 불법 변경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속도제한장치 조작

은 불법이지만 이씨는 “다른 차주들도 선뜻 하는 일”이라며 별다른 생각 없이 불법 제한장치 기능을 변경했다.

정부의 대형화물차 등 속도제한장치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다. 단속 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일손 부족 등을 이유로 속도 제한 장치에 대한 점검·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애꿎은 승용차 운전자들만 불안함에 떨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24일 차량에 장착된 최고 속도 제한 장치에 접속해 프로그램을 변경, 속도 제한 기능을 무력화시킨 혐의

(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50)씨 등 2명을 입건했다.

30만원만 내면 손쉽게 속도제한 기능을 무력화해 과속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300명이 넘는 대형 화물차주들이 이들에게 속도 제한 기능 조작을 의뢰했다는 경찰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 1995년 과속으로 인한 대형 사고 감소를 위해 10t 이상 승합차와 적재중량 8t 이상 화물차에 대해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부터 모든 승합차와 총중량 3.5톤 초과화물차, 특수차에 대해서도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대형 사업용차량의 과속운전으로부터 승용차 운전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는 유명무실화한 지 오래다.

손쉽게 차량 개조가 가능한데,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시간(속도)이 돈’이라는 화물차와 버스 운송업자의 사업 특성이 맞물리면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관도 시속 40~60km로 속력을 설정한 채 차량검사를 진행, 사실상 속도 제한장치 기능 점검에는 허점을 드러냈다. 정부가 지난 2006년 대형 화물차 속도제한 기능 문제가 제기되면서 내놓은 ‘자동차 정기검사 점검 강화 발표’도 말뿐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개조, 승합차나 화물차가 과속 질주하는 데 따른 처벌 수위도 과태료 부과(100만원)에서 징역·벌금형(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낮아졌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24일 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의 도심속 생태공원으로 자리잡은 광주시 서구 매월동 전평저수지에 연분홍빛 연꽃들이 만개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의료폐기물업체 봐 준 공무원 입건

영산강환경청 직원 박모씨 사업권 허가 관련 직무유기

법정 기간 내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처리 업체에 사업권 허가 취소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아 특혜 의혹을 불러 일으킨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법정 기간 내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 사업권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직원 박모(43)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 박씨는 광주시 남구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허가와 관련, H업체가 지난 2010년 4월 1일 폐기물처리계획서 적합을 통보받은 뒤 최장 4년 이내에 설비를 완료하고 허가를 받

아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업체는 기간 만료를 열흘 앞둔 지난 3월 21일에서야 시설 준공도 마치지 않은 채 허가서를 제출했고, A씨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고서도 시설 보완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업권 허가 반려 신청 등 적법한 행정 처분

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무원은 또 삼급 기관인 환경부의 유권해석 지침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법정 기간 내에 의료폐기물 처리 시설 등 설비를 완료하지 못한 H업체는 광주시 남구청과의 ‘건축 취소’ 법정 공방으로 27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므로 이 기간만큼 허가신청 기간을 유예해줄 것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은 환경부는 법정공방을 기간 연장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렸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9 해질 05:31
해짐 19:09 밑짐 18:43

중일 빗방울

비는 늦은 오후에 서해안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모두 그치겠다.(예상 강수량 50~100mm)

지역별 날씨 (℃)

광주	한때 비	22/26	보성	비	23/26
목포	한때 비	22/25	순천	한때 비	24/27
여수	비	24/26	영광	한때 비	22/26
나주	한때 비	22/26	진도	한때 비	23/26
완도	한때 비	23/26	전주	비	22/27
구례	한때 비	23/27	군산	한때 비	21/26
강진	한때 비	23/26	남원	비	20/26
해남	한때 비	23/26	속산도	한때 비	21/24
장성	한때 비	22/26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남서	0.5~0.5	서~북서	0.5~0.5
남해 서부	남~남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서부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남해 서부	남~남서	1.0~2.0	남서~서	1.0~2.5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2:15	07:31	14:14	19:33
여수	08:56	02:51	08:56	02:51
	21:28	14:58	21:28	14:58

주간 날씨

26(화)	27(수)	28(목)	29(금)	30(토)	31(일)	9/1(월)
22/28	22/28	21/28	21/26	21/27	22/28	22/28

생활지수

	76
	10
	20

조선대 이사회, 본부 행정인력 감축안 논란

학내 자치기구 “행정조직 장악 의도” 강력 반발

조선대 이사회가 대학 본부 행정인력 감축을 주 내용으로 한 행정조직 직제개편안을 마련해 추진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사회가 직접 직제개편안을 만든 전례가 없는 데다 직제개편안을 추경에 산안 처리와 연계해 대학에 수용을 압박하고 나서자, 학내 자치기구들이 반발하고 있다.

24일 조선대 이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1일 7차인 대학본부의 행정 직제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현재 300여명인 행정 인력

축소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본부도 1일 7차 산하의 62개팀 중 10개팀을 줄이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이었으나 이사회로부터 개편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의 이 같은 행정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해 대학본부 노조 등 학내 자치기구들은 “행정조직을 이사회가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지난 21일 이후 집회를 열어 반발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커피 하루 2잔만 마셔도 카페인 권고량 초과”

습관처럼 카페에 들러 마시는 커피에 카페인 함량이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 함유량은 얼마나 될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커피전문점의 즉석제조 커피 중 인기 품목인 아메리카노, 카페라테, 카페모가, 캐러멜마끼아또 등 4종 11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페인 함유량이 평균 0.37mg/ml로 나타났다. 가공식품의 경우 카페인이 0.15mg/ml

이상이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이지만 즉석제조 커피는 함량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한 표시는 없다.

그러나 1회 제공량으로 보면 즉석제조 커피에는 최대 206.7mg(평균 109.3mg)의 카페인이 함유돼 국내 카페인 1일 섭취 권고량(성인 400mg 이하, 임산부는 300mg 이하)을 고려하면 성인은 하루 2잔 이상만 마셔도 권고량을 초과하게 된다. /연합뉴스

부안수협
위해요소 중점관리우수식품
위생의결합연계

식약청HACCP지정업체
(광주청 제201호)

뽕잎으로 절여
비린내가 전혀없는
뽕잎간고등어

부안수협의 모든 수산물 제품은
100% 국산 만을 사용합니다.

부안수협 수산물가공공장은 식약청 HACCP 시스템 지정업체로 최첨단 설비와 위생시스템을 갖추고 제품 하나하나마다 정성을 담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품선물세트

뽕잎간고등어

뽕잎맛김

조합장 김진태

부안수협업협동조합
www.buansuhyup.co.kr
고객기쁨센터: 063)584-3101~2

● 겨울철 참 고등어만 사용해 씹는맛이 다릅니다.
● 특허받은 뽕잎절임기술을 사용하여 고등어 특유의 비린내가 없습니다.
●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가시를 발라내어 조리하시기 편리합니다.
● 부안수협의 위생적인 살균시스템을 통해 믿을수 있습니다.